

원유 생산량 증가, 현장선 “어쩐지...”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목장단위의 생산성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 낙농가들의 생산의욕은 높아졌지만 목장의 생산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FMD이후 유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원유 쿼터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쿼터량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목장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목장들의 생산성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품질 저하를 비롯해 FMD백신 접종 이후 생산량 감소, FMD이후 젖소 도태 지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안성의 한 목장 관계자는 “기본원유가 이후 원유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주변의 목장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사료업체 관계자는 “사료값 인상 이후 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TMR사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사료품질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목장들의 생산성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목장들은 FMD백신 접종 이후 유량이 감소하는 등 FMD백신 부작용도 호소하고 있다. 농가들은 FMD백신 접종 이후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유량이 감소하고 이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FMD와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에 따라 젖소 도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두당 산유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 9월 까지 젖소 도축실적을 보면 2만8천218두로 전년 동기 4만4천626두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젖소 도태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에 축산계 반발

환경부가 지난 11월 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한데 대해 축산계가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5일 성명을 발표해, “환경부가 축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함으로써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한국 축산업의 씨가 마를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정권고안에 따르면, 가구당 50m 기준으로 5~10호 단위로 묶어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이와 축사간의 거리를 한우 100m, 젖소 250m, 양돈·닭·오리 500m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지자체별 조례로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기준으로 한다면 축산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 축단협은 “실례로 충남 부여의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부여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5가구 이상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양돈, 양계, 오리농가가 86.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꼴이 되었다. 심지어 많은 지자체에서 신축은 물론 개축 및 증축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내 축산업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권고안 시달 이전에도 2010년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92개소(83%)가 지방조례를 제정하여 가축제한구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중앙정부의 정확한 지침시달이 중요하다면 축산업 여건과 분포, 환경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산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부처간의 ‘엇박자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FTA대책으로 그나마 내세우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환경부의 지정권고안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진단 '권역화' 시급

일요일인 지난 1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상황실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의 한우농가에서 오후 4시경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신고는 21일 오후 2시경 구제역이 아닌 것(음성)으로 판명됐지만 20시간 이상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구제역이 종료된 4월20일 이후 벌써 17번째 겪는 일이다.

방역당국 등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제역 의심신고에 따른 판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전라지역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현장출동 및 시료 채취 등에 12시간 이상이 허비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전국 어디든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경기 안양에 위치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SOP 규정을 개선해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도별로 설치된 구제역 정밀검사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비효율적인 SOP 규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밀진단기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17번의 구제역 의심신고 가운데 14건이 경북·경남지역에서 접수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SOP 규정으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국가의 중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긴급조치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행착오를 여러번 거친 만큼 하루빨리 SOP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각 지역별 전문인력을 양성, 지자체 단위로 신속하게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강력해 시료를 잘못 채취하거나 다루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면서 "그렇더라도 의심신고 때마다 본부에서 출동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합리한 SOP 규정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美 유제품 이어 유기농 원료까지 한국시장 '기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치즈 등 유가공 제품에 이어 유청단백 등 유가공 원료물질 판촉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 한국사무소(대표 이윤상)는 10일 국내 유가공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청단백의 혁신, 건강과 웰빙' 세미나를 열고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소속 연구자 데이비드 베어 박사의 최신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이스크림은 물론 요구르트·음료·가공육·소시지·감자칩·빵·쿠키·에너지 음료·영양보충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유청단백의 기능성과 체중 조절 및 신체구성 개선효과를 발표하고 활용 가능성을 홍보했다. 세미나에서 소개된 물질인 유청단백은 치즈 생산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 결과 단백질 함유량이 80% 미만인 식용 유청은 무관세 할당물량이 3,000t 제공되고 해마다 3%씩 증량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단백질 함유량이 80%를 넘는 식용 유청은 5년 동안 관세가 철폐돼 수입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이후 올 초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원유 생산이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치즈를 생산하거나 유청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가공업체들은 미국 유가공업체들의 공격적인 원료물질 판촉활동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제 치즈시장과 미국 치즈산업'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국내 유제품 수입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회를 가졌던 USDEC 관계자는 "유청단백의 다양한 기능성과 활용도를 감안하면 한국 소비자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높다"며 "FTA 비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홍보와 판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업체들 숨통 트었다

서울우유가 우윳값을 인상한 이후 주요 유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하면서, 일단 유업체들의 숨통이 트이며 낙농가들에게 인상된 원유가 지급을 보류하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흰우유 가격은 2천300원에서 2천350원 수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번 제품값 인상에 기본원유가 인상분만이 반영됨에 따라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은 반영시키지 못해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물가당국에 이어 대형유통업체들마저 우윳값 인상을 제동을 걸면서 서울우유를 비롯한 유업체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상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됐다.

때문에 유업체들은 기본원유가 인상분은 반영시켰지만 여전히 경영여건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과 함께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따른 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이를 시행해 보니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것도 유업체들이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원유 수취가격은 1천원에 육박한 평균 988.85원으로 기본원유가 인상전인 7월 평균 829.16원보다 159.69원이, 전년 동월보다는 144원이 높아졌다.

'축산규제 강화' 지방조례 확산

환경부가 기존 지자체의 지방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지방조례 기준을 대폭 강화한데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지방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지역은 174곳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읍면 소재지', 또는 '주거밀집 지역 반경 100m' 수준에서 사육을 제한해 왔지만 점차 기준을 강화하려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 최근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이같은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권고안에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한우 100m △젖소 250m △돼지, 닭, 오리 500m 이내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으로 최소단위를 5~10호 이상으로 하되 가구간의 거리를 대지경계선에서 50m기준으로 설정했다.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축산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들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축산업 말살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는 형태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사례는 있어도 국내처럼 농업진흥지역까지 대다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1km 이내 5가구가 없으면서 도로와 전기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충남 부여의 경우 최근 환경부 권고안을 토대로 지방조례를 개정, 전체의 90% 육박하는 지역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기존의 축사라도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 포함될 경우 신축은 물론 개축과 증축까지 불허, 재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시간이 흐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FTA 핵심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그림의 떡'이라는데 한결같은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방조례가 가축분뇨를 관리 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취지를 벗어나 축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 해석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 규제는 '축산법' 내에서 그 범위와 조건, 지원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되 국내 축산업 자급률 유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기준 조정과정을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지방조례가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